

## 베트남 교민의 부동산과 지분이전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과세문제 검토

CTAC EJ Vietnam

김일중 대표 회계사

많은 수의 한국 회사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으로 향했던 한국기업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베트남, 인도 등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오랜기간 세무자문업을 진행해 온 경험으로 한국기업들이 해외 법인의 주식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 및 양수 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국제조세 이슈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조세 이슈는 지분의 양수도 뿐만이 아니라 급여 생활자의 개인소득세의 납부, 이자, 배당, 사용료 지급, 사업소득의 송금 등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에게도 널리 적용되는 문제라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생활하고 있는 교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 1 어디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가?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기업들과 교민들이 사업활동을 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베트남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납세의무의 판단은 베트남 세법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법규정을 확인하여야 하고, 추가로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후 “한베조세조약”)에 대한 규정내용까지 함께 확인하여 어디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지, 얼마나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과 업무에 바쁜 우리기업과 교민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민들의 경우에 한국의 세법상 과세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거주자란 쉽게 말해서 세법상으로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권(국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국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람들도 베트남 소재기업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소득은 베트남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베트남 세법상 베트남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베트남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및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한국세법, 베트남세법 및 한베조세협약 비교)

### 1.1.1 한국세법의 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 1.1.1.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1.1.1.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4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1.1.1.3 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직간접출자한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1.1.2 베트남 세법의 정의 (개인소득세법 제1조)

거주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역년 동안, 또는 베트남에 최초 체류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계속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는 경우
2. 베트남에 거소를 두고 상주거소를 등록하거나, 또는 베트남에 체류하기 위해 기한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주택을 점유하는 경우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본인이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니면, 베트남의 거주자인지 혼란스러울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소득세법에 의하면 한국 거주자이면서도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베트남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과 베트남 어디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가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 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조항부분을 보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규정의 해석은 한국과 베트남 세법규정을 놓고 적용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두 국가의 규정에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의 해석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1.1.3 한국 베트남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정의 (한베조세협약 제4조)

##### 제4조【거주자】[1994.09.09]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居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위의 조세협약의 규정을 보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거주자로 중복 판단되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판단하는 주요한 요인은 "항구적 거주지"나 "일상적인 거소"가 어느 국가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세법 및 조세협약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즉, 국내 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한국뿐 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모회사가 100% 직간접으로 지분을 소유한 베트남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단신 부임한 베트남 교민의 경우에는 한국세법에 의하면 한국 거주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즉,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교민의 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향후 한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거주자의 개념을 설명하였지만, 실제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이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주자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양도/상속/증여 등 세액을 계산할 때 각종 세액공제와 비과세/면세 적용이 가능하여 유리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비거주자로 구분되어 해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1. 한국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세목별 납세의무<sup>1</sup>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국외 소득	국내 소득
	특별공제	○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국외 상속재산	국내 상속재산
	기초공제	○	×
	인적공제, 일괄공제	○	×
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국외 수증재산	국내 수증재산
	배우자 증여공제	○	×

<sup>1</sup> 오성택, 세법상 비거주자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2018)

판례의 사례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에 대한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1.4 한국판례 검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킨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납세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던 중에 가족 중 납세자와 처가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 아들 2명은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청산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들들이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각 미국으로 이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때까지는 납세자의 가족 및 자산 등이 있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여전히 거주자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039 판결)

조심(2010중1675, 2011. 1. 7.) 주소가 국내에 있더라도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외에서의 직업을 주소보다 우선하여 결정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2015. 4. 17. 선고 2013구합 64554 판결은 1년 이상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근로하여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국내의 주소가 우선된다고 판단하여 국고주의적 입장을 취함.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소통칙1-3)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33, 2015.4.14.): 청구인은 출국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점, 배우자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점,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근로소득, 배당소득을 얻은 점, 청구인도 자신을 거주자인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기와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단순히 183일의 체류기간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본인의 가족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내에 집이나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의료보험을 납부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근로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을 한국에서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로 판단할 여지가 높으므로, 실제적인 판단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 2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및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2.1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 MCAA)

앞서 언급한 거주자/비거주자 기준의 판단을 한 후에,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의하여 해외금융계좌를 한국의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OECD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적 납세의무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정보교환 표준 모델인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을 제정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4개국이 동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 12월 현재 베트남은 당해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베트남 금융기관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한국 국세청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에 의하여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고, 당해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벌금규모가 매우 크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7조) 그러므로 2019년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2020년 6월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3 신고의무자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됩니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 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2.4 신고의무면제자

신고의무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1. 재외납세자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2019년 보유분부터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자

2.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4.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주로 금융회사)

## 2.5 신고대상범위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5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은 현금/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 2.6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을 받는다.

- ①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②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및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
- ③ (형사처분)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자국내 금융기관 정보를 공유하는 MCAA 협정에 미가입하였으나 한국세법에 근거하여 베트남 내에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한국 거주자는 한국 과세당국에 당해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기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후에,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사례를 통하여 발생하는 납세의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부동산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양도/상속/증여 세금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교민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한국거주자로 구분될 수도 있고, 베트남거주자 (한국비거주자)로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에 발생하는 납세문제에 대해서 상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1 한국 거주자인 경우

#### 3.1.1 한국에서의 납세의무

##### 3.1.1.1 한국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에는 각 단계별로 국내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단계별 한국에서 발생하는 납세의무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2. 거래 단계별로 발생하는 한국측 세금문제<sup>2</sup>

구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내용		취득자금증여	임대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상속증여가액
적용 세율	한국	10%~50% 누진 세율	6~42% 누진세 율	6~42% 누진 세율	10%~50% 누 진세율
	베트남	없음	부가세5 및 소 득세5%	양도가액의 2%	과세가액의 10%(1천만동초 과분)
한국과세효과		과세해당분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과세해당분전 액

상기 내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단계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이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도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증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개별단계별로 발생하는 납세의무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3.1.1.2 취득단계(한국)

취득단계에서는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한국에 신고/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는 10년 내에 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일정금액(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및 비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금액을 친족이 아니라 친족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비과세/면제금액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sup>2</sup> 2019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참고로, 10억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추정을 받는 경우에 취득자금의 80% 이상의 자금출처를 증명하면 취득자금 전체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 3.1.1.3 보유단계(한국)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유단계에서 한국에 납부할 납세의무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국인 베트남 세법에 근거하여 베트남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한국에서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동일소득에서 대해서 베트남과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3.1.1.4 처분단계(한국)

##### 3.1.1.4.1 양도하는 경우(한국)

한국의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해당국에 납세의무를 이행한 다음, 다시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거주자인 베트남 교민의 입장에서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세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시 한국 국세청에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앞서 보유단계에서와 같이 베트남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 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내 주택양도시점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보유수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국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40%(부당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세율<sup>3</sup>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3. 해외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국외자산 종류	보유 기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또는 건물</li> <li>•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li> <li>• 기타자산</li> </ul>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음	1천200만 원 이하	6%	-
		1천200만 원 초과 ~ 4천 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4천 600만 원 초과 ~ 8천 800만 원 이하	24%	522만원
		8천 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원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절차와 동일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명세서
- 외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

#### 3.1.1.4.2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한국)

만약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보유주택을 한국거주자에게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세법에 의하여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고, 다시 한국 과세당국에 국외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의 구조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적용세율과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 기한 등에 대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항목의 차이만을 설

<sup>3</sup> 2019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4.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sup>4</sup> (거주자와 비거주자 동일)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표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차이<sup>5</sup>

구 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①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9월 이내
② 과세대상 재산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③ 공제금액		
· 공과금	미납된 모든 공과금	국내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 장례비용	공제	공제 안됨
· 채무	모든 채무 공제(증여채무 제외)	국내 상속재산에 저장권으로 담보된 채무(증여채무 제외)
④ 과세표준의 계산		
· 기초공제(2억)	공제	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공제	공제 안됨
· 일괄공제(5억)	공제	공제 안됨
· 배우자상속공제	공제	공제 안됨
· 금융재산상속공제	공제	공제 안됨
· 재해손실공제	공제	공제 안됨
·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	공제 안됨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공제

증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은 상기 표4의 세율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일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

<sup>4</sup> 재증납세자가 알아야할 한중세금상식(2019), 상하이총영사관

<sup>5</sup> 상동

하는 금액을 할증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아 가산한 증여재산 관련 증여세액은 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상속세보다 비교적 단순하게 되어 있으며, 아래 친족에 대한 공제 금액을 유의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을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 만을 염두에 둔다면, 수증자가 한국거주자인 경우가 비거주자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표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재산 공제금액차이

	거주자 <sup>6</sup>	비거주자
직계존속	5천만원	없음
직계비속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천만원	
타인	없음	

### 3.1.2 베트남에서의 납세의무

#### 3.1.2.1 취득단계(베트남)

베트남에서 아파트 분양 받는 경우 한국과 달리 취득세는 없으나 소유권 등기 시 분양가액에 대해 0.5%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 건물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세금은 아니지만 유지보수비(한국의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2%를 선 납부해야 합니다.

#### 3.1.2.2 보유단계(베트남)

베트남의 경우 연간 1억동, 우리 돈 약 5백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5%, 개인소득세 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임대소득이 1억동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은 추가로 임대소득 수준에 따라 30만동~100만동(약 15천원에서 5만원)의 면허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는 개인이 직접 신고(통상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대행)하거나 법인에서 임차하는 경우 원천징수 할 수도 있습니다.

<sup>6</sup> 2016년 1월 1일 이후적용

### 3.1.2.3 처분단계(베트남)-양도 또는 상속/증여

처분단계에서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베트남 세법상의 세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3.1.2.3.1 양도소득세

베트남의 경우 양도세는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의 2%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 후 잔여금액은 매매 계약서, 양도세 신고 납부 영수증 등 베트남 현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시고 국내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3.1.2.3.2 상속/증여세

베트남 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포상소득, 상속/증여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개인소득세법 제31조의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증여소득은 베트남 내에서 비거주자가 받은 소득건 별로 천만동을 초과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10%의 세율은 부동산 자산(부동산거래법에 따른 미래의 주택 및 건설중인 자산을 포함)을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 양부모 및 양자녀간, 사위, 며느리, 시부모 및 장인 장모간, 조부모 및 손자간 및 형제자매간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sup>7</sup>. 당해 조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나, 거주자의 과세소득인 경우에는 베트남 경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지불 및 수령한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베트남 경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증여로 인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한국의 거주자(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 기타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는 앞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때와 동일하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 납부세액공제의 형식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3.1.3 한국 베트남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부동산 양도 등에 대한 규정 (한베조세협약 제13조)

---

<sup>7</sup> Article 3 - Circular 111/2013

한국과 베트남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 중에 한국의 거주자가 베트남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베트남 세법에 근거하여 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후 당해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국의 과세당국에 해외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13조【양도소득】[1994.09.09]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3.2 한국 비거주자(베트남거주자)인 경우

한국비거주자(베트남 거주자)인 경우에 베트남에서의 자산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부담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산의 소재지가 베트남에 소재한 자산인 경우에는 한국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세법규정에서 한국에 신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베트남에서만 당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3.1.2 내용을 참고하면 되며, 개인소득세 측면에서의 상속/증여 관련 베트남 세법규정을 상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3.2.1 베트남 상속/증여세 개정연혁

베트남에서의 상속 및 증여서는 여러 번의 세법개정절차를 거쳤습니다. 비록 상속 및 증여세의 적용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고 전체 세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준이지만 사회적인 관심은 많은 편입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베트남의 상속 및 증여세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현금증여에 한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 증여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율은 2백만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sup>8</sup>에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상속 및 증여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베트남 교민으로부터 송금되는 증여금액에 대한 세금도 해외교민들의 국내송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지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베트남 국회에서 승인한 개인소득세법<sup>9</sup>에 근거하여 10가지 종류의 소득종류에 대해서 과

---

<sup>8</sup> Ordinance No. 35/2001/PL-UBTVQH10

<sup>9</sup> The Law on personal income tax (PIT) - number 04/2007/QH12 was approved by the Vietnam's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2007

세를 결정하고 그 중에 상속 및 증여소득에 대하여도 세부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의 상속 및 증여세법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sup>10</sup>.

### 3.2.2 현행 베트남 상속/증여세 과세규정

#### 3.2.2.1 상속/증여세 과세대상물건

- ✓ 증권법이나 기업법에 의한 합자기업의 주식, 채권 및 지분 등에 대한 증여
- ✓ 유한회사, 조합, 파트너쉽, 개인기업, 법에 의해 설립된 펀드 등을 포함한 기업에 대한 자본증여
-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사용권, 기반시설 이용 등 기타의 소득 (비과세 부동산 소득을 제외함)에 대한 상속 및 증여
- ✓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항공기, 요트 등 등기를 요하는 동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

#### 3.2.2.2 과세표준 및 과세소득의 계산

- ✓ 매 수령시점별로 1천만동을 상속 및 증여소득으로부터 공제
- ✓ 증여시점의 개인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과세금액 = 과세소득 \* 10% (거래별로 1천만동을 초과하는 금액)
- ✓ 단, 부동산 자산(부동산거래법에 따른 미래의 주택 및 건설중인 자산을 포함)을 아래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면세
  1.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 양부모 및 양자녀간, 사위, 며느리, 시부모 및 장인 장모간, 조부모 및 손자간 및 형제자매간 증여
  2. 당해 조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나, 거주자의 과세소득인 경우에는 베트남 경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지불 및 수령한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베트남 경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 3.2.2.3 상속자산 가액평가

---

<sup>10</sup> Circular 111/2013/TT-BTC, Circular 92/2015/TT-BTC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sup>11</sup>:

✓ 부동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등기시점에 지방인민위원회에서 발행된 토지가격.
2. 주택 및 건축토지는 등기시점에 주택분류및건축표준 담당기관의 규정에 근거한 잔존가격.

✓ 소유권 또는 등기를 요하는 권리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 가격은 상속 및 증여를 위한 등기시점에 지역인민위원회에서 공시한 가격.

#### 3.2.2.4 납세의무의 발생시점

✓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납세의무의 발생시점은 당해 소유권 및 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인이 등기하는 시점으로 본다.

한국의 비거주자인 경우(베트남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베트남 세법규정의 내용으로 과세가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보다 부담세액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정리한 것처럼 부동산의 형태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증여로 인한 부담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세법에서 규정한 상속 및 증여세율은 전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양도소득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액의 부담은 각 개인의 상황과 자산소재지에 따라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적에 반드시 꼼꼼하게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처분과 취득과는 달리 회사의 지분과 같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관련 세금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4 지분/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양도/상속/증여 세금문제

앞서 3장에서는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이외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베트남 투자법인의 지분 등을 양도하거나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sup>11</sup> Article 16 of Circular 111/2013 / TT-BTC (amended by Clause 1 and Clause 2 Article 19 of Circular 92/2015 / TT-BTC)



## 4.1 한국 거주자인 경우

### 4.1.1 한국에서의 납세의무

#### 4.1.1.1 한국 거주자가 지분의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sup>12</sup>

부동산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지분을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국내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베트남교민이 한국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한국에서 발생하는 납세의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내용	취득자금증여	배당	주식양도소득	상속증여가액
한국	10%~50%	14% 또는 누진세율	20%(상장중소기업 10%)	10%~50% 누진세율
베트남	10%(1천만동초과분)	5%(개인), 0%(법인)	총판매가격의 0.5%	10%(1천만동초과분)
조세조약	해당없음	10% 제한세율	일반주식은 베트남 비과세, 부동산법인주식은 베트남과세	해당자산 및 적용세금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한국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해당여부 거래별 검토

아래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각 거래단계별로 발생가능한 한국측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4.1.1.1.1 취득단계(한국)

취득단계에서는 해외지분 취득에 대하여 한국에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증여세 규정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부동산양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1.1.1.2 보유단계(한국)

<sup>12</sup> 해외주식과 세금(국세청, 2018) 참조

해외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유단계에서 해외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가능한 납세의무는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보유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배당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해당 국외소득이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른 소득(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증권사를 통해 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한국증권사는 한국세법에 의해 15.4%(소득세 14%, 주민세1.4%)를 원천징수하는데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 14%에서 현지 원천징수세율을 차감하여 산출한 세액),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면 됩니다<sup>13</sup>.

#### 4.1.1.1.3 처분단계(한국)

##### 4.1.1.1.3.1 양도하는 경우(한국)

한국의 거주자가 해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한 해외 지분에 대해서 해당국에 납세의무를 이행한 다음, 다시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적용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상장중소기업은 10%)를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시 손실을 보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과세기간(1.1~12.31)중 다른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sup>14</sup>되어, 한국주식과 해외주식, 어느 한 쪽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가능합니다<sup>15</sup>. 금융기관에 지불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sup>13</sup>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및제5항, 제129조제4항

<sup>14</sup>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12.30. 기획재정부)

<sup>15</sup>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4.1.1.1.3.2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한국)

만약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지분을 한국거주자에게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세법에 의하여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고, 다시 한국 과세당국에 국외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의 구조는 앞서 언급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의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증여대상 지분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주식/지분의 양도, 상속 및 증여시점에 국제조정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한국의 과세당국은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을 보충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sup>16</sup>.

한국의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안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4.1.2 베트남에서의 납세의무

베트남 세법의 이자, 배당 및 지분양도 소득(수동적소득)에 대한 베트남 세법<sup>17</sup>의 일반내용을

---

<sup>16</sup> 심판례(국심2005서1406, 2005.7.5.) 및 예규(서면 인터넷방문 상담2팀-2030, 2004.10.5.)에서도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봄, 다만,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과세관청에 두고 있음(2015.8.13.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470 판결)

<sup>17</sup> Circular 111/2013/TT-BTC: CIRCULA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PERSONAL INCOME TAX, THE LAW ON THE AMENDMENTS TO THE LAW ON PERSONAL INCOME TAX, AND THE GOVERNMENT'S DECREE NO. 65/2013/ND-CP ELABORA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PERSONAL INCOME TAX AND THE LAW ON THE AMENDMENTS TO THE LAW ON PERSONAL INCOME TAX.

Circular 119/2014/TT-BTC: CIRCULAR AMENDMENTS TO SOME ARTICLES OF CIRCULAR NO.

156/2013/TT-BTC DATED NOVEMBER 06, 2013, CIRCULAR NO. 111/2013/TT-BTC DATED AUGUST 15,

우선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4.1.2.1 취득단계(베트남)

베트남 세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포상소득, 상속/증여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개인소득세법 제31조의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증여소득은 베트남 내에서 비거주자가 받은 소득건 별로 천만동을 초과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4.1.2.2 보유단계(베트남)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의 동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며, 기타형태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배당금의 지급<sup>18</sup>을 살펴보면 배당금은 납세가 완료된 이후에 송금이 가능하며, 1년에 한번 회사의 과세연도가 종료된 후 감사보고서가 준비된 경우에 송금이 가능함. 배당금은 현금 및 등가물로 지급이 가능함. 당해 지급내용은 베트남 외환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배당가능금액<sup>19</sup>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송금가능한 연간이익은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법인세 대차대조표 상의 순이익에서 전년도 미분배이익을 가산한 후 베트남 내에 외국투자자의 생산, 사업활동 및 개인적인 소요를 위하여 재투자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2013, CIRCULAR NO. 219/2013/TT-BTC DATED DECEMBER 31, 2013, CIRCULAR NO. 08/2013/TT-BTC DATED JANUARY 10, 2013, CIRCULAR NO. 85/2011/TT-BTC DATED JUNE 17, 2011, CIRCULAR NO. 39/2014/TT-BTC DATED MARCH 31, 2014, AND CIRCULAR NO. 78/2014/TT-BTC DATED JUNE 18, 2014 OF THE MINISTRY OF FINANCE IN ORDER TO SIMPLIFY TAX FORMALITIES

Circular 92/2015/TT-BTC: CIRCULAR GUIDELINES FOR VAT AND PERSONAL INCOME TAX INCURRED BY RESIDENTS DOING BUSINESS, AMENDMENTS TO SOME ARTICLES ON PERSONAL INCOME TAX OF THE LAW NO. 71/2014/QH13 ON THE AMENDMENTS TO TAX LAWS AND THE GOVERNMENT'S DECREE NO. 12/2015/NĐ-CP DATED FEBRUARY 12, 2015 ON GUIDELINES FOR THE LAW ON THE AMENDMENTS TO TAX LAWS AND DECREES ON TAXATION.

<sup>18</sup> Circular No. 186/2010/TT-BTC - Guiding The Remittance Abroad Of Profits Earned By Foreig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From Their Direct Investment In Vietnam Under The Investment Law

<sup>19</sup> Article 3, Circular No. 186/2010/TT-BTC

배당금액은 법인인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원천징수세금이 없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적어도 송금일 7일 이전에 관할 세무당국에 국외송금 신청하고 이를 승인하는 통지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 4.1.2.3 처분단계(베트남)-양도 또는 상속/증여

처분단계에서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베트남 세법상의 세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4.1.2.3.1 양도소득

자본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자본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양도가 베트남내 또는 외국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거주자가 베트남 법인 또는 개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받은 양도가액에 0.1%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지분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투자손실은 개인소득세 측면에서 공제불가한 비용입니다.

##### 4.1.2.3.2 상속/증여세

베트남 세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증여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는 천만동이 넘는 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양도의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1.2.3.2.1 상속/증여세 과세대상물건

1. 증권법이나 기업법에 의한 합자기업의 주식, 채권 및 지분 등에 대한 증여
2. 유한회사, 조합, 파트너십, 개인기업, 법에 의해 설립된 펀드 등을 포함한 기업에 대한 자본증여

##### 4.1.2.3.2.2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증권에 대한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은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의 증권가치로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치는 소유권 등기 이전시점의 주식시장가격
2.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식가치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검토 받은 가장 최근의 장부가치.

3. 출자지분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은 출자지분의 등기이전 가장 최근의 장부가치

#### 4.1.2.3.2.3 과세표준 및 과세소득의 계산

1. 매 수령시점별로 1천만동을 상속 및 증여소득으로부터 공제
2. 증여시점의 개인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과세금액 = 과세소득 \* 10% (거래별로 1천만동을 초과하는 금액)

#### 4.2 한국 베트남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배당 및 지분양도 등에 대한 규정 (한베조세협약 제13조)

한국과 베트남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당소득과 지분양도소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의하면, 배당소득에서 대해서는 최고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베트남 세법의 5% 또는 0% 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세법에 의하여 차액을 과세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분양도소득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하여야 하는데 1.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지분인 경우에는 베트남 법인의 지분양도에 소득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2. 기타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주자가 베트남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과세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제10조【배당】[1994.09.0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양도소득】[1994.09.09]

(생략)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4.3 한국 비거주자(베트남거주자)인 경우

한국비거주자(베트남 거주자)인 경우에 베트남에서의 자산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부담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산의 소재지가 베트남에 소재한 자산인 경우에는 한국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세법규정에서 한국에 신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베트남 4.1.2의 세법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5 맺음말

해외에 거주한지 14년째에 들어서는 해외교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국의 세금제도와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의 세금제도를 잘 이해해서 본인들의 세금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의 한국교민들이 베트남에 10년이 넘게 살고 있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과세를 당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족과 자산이 그대로 있거나 한국기업의 주재원으로 오랜기간 근무한 분들, 또 심지어 한국에 가서 의료보험이나 복지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베트남 소득이나 자산의 처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국에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요즈음에 기본적인 세금의 과세원칙을 각자가 알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문헌:

베트남세법(삼일인포마인, 김준석, 한경배, 이삼한, 김태경 공저, 2019년)

2019 재증납세자가 알아야할 한/중 세금상식(국세청, 상하이영사관)

해외주식등과 세금(2018년, 국세청)

부동산과 세금(2019년, 국세청)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0)

세법상 비거주자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오성택, 2018 건국대학교)

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 가입국가(OECD, <https://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international-framework-for-the-crs/>)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해설(국세청, 2019)